

김재철 주소지는 아직도 '경남 사천'

주민등록법 위반 '주거부정' 확인

특급 호텔에 전전하거나, 회사가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출근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김재철은 사실상 주거가 일정치 않은 떠돌이 같은 생활방식을 보여 왔다. 도대체 김재철의 집은 어디인가? 회사 인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장 김재철의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이다. 그런데 빌라 경비원은 김재철이 청주MBC 사장으로 부임한 지난 2008년 이후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년 전에 김재철을 봤다는 소수의 목격자만 이웃에 있을 뿐이다. 2008년 3월 이후 4년 넘게 집을 비웠거나, 이사를 간 뒤에 어떤 이유가 있어 회사 내부용인 인사정보시스템에 옛 주소를 수정하지 않았던 것일까? 하지만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법인 등기부를 확인하면 전혀 차원이 다른 놀라운 사실들이 펼쳐진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법인 등산·세원일보 기타

▶ 열람/발급하기

- 열람하기
- 발급하기

대표이사 김재철 581218-1-1****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2010년 02월 26일 취임	2010년 03월 19일 등기
대표이사 김재철 581218-1-1****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2011년 02월 28일 취임	2011년 03월 09일 등기
2011년 02월 28일 취임	2011년 03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최현미 570215-1-1****	
2010년 03월 19일 취임	2010년 03월 25일 등기
사내이사 이은영 560118-1-1****	
2010년 03월 19일 취임	2010년 03월 25일 등기
감사 임진택 510215-1-1****	
2010년 06월 23일 취임	2010년 07월 07일 등기
사내이사 최영호 541208-1-1****	
2011년 02월 28일 취임	2011년 03월 09일 등기
2012년 05월 07일 사임	2012년 05월 08일 등기
사내이사 박종문 581211-1-1****	
2011년 02월 28일 취임	2011년 03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고인환 581211-1-1****	
2011년 02월 28일 취임	2011년 03월 09일 등기

가 아닌 곳에 일부터 주민등록을 해놓는 행위, 바로 '위장 전입'이다. 법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조합이 고소한 김재철의 비리에 이어 중대한 불법 행위가 또 하나 추가된 셈이다.

보통 '위장 전입'은 자녀 학군 배정 또는 부동산 투기가 목적인 경우가 많지만 김재철의 경우엔 좀 더 특수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은 오래 전부터 고향 사천에서 열리는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 적극 참석해왔고 사천 지역 전통춤인 '가산오광대' 후원회장을 맡는 등 지역 챙기기에 각별한 공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단순한 고향 사랑을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었다. 이런 행태 때문에 사천에서 김재철의 '정계 진출'은 오래전부터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 때문에 조합은 김재철에게 '출마 포기 선언'을 요구하는 등 정계 진출이라는 사의를 위해 MBC를 약용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사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나?

주식회사가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등기소는 이 주소지를 법인 등기에 기록하게 돼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문화방송의 법인 등기부를 열람해 봤다. 대표이사 김재철은 2010년 2월 16일 취임해 3월 15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돼있다.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가 아닌 '경남 사천시 용현면 00리 XX아파트'로 기재돼있다. 확인 결과 김재철이 경남 사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5년 전인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산MBC 법인 등기에 따르면 김재철은 울산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초만 해도 서울 서초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이후 2007년 5월 김재철은 주소지를 옮겼는데, 이상하게도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울산이 아닌 '경남 사천시 사남면'의 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바꿨다.

5년 간 '사천' 에서 세 번 주소 옮겨

2008년 3월 청주MBC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재철의 주소지는 다시 바뀐다. 이번에는 청주로 옮긴 걸까. 아니었다. 이번에도 '경남 사천시'였다. '사천시 용현면'의 한 아파트로 옮겼다. 청주MBC와는 220km나 떨어져 여전히 출퇴근은 불가능하다. 2010년 본사 사장으로 옮

긴 뒤에도 김재철은 법인 등기부의 주민등록상 계속 이 주소지에 사는 것으로 돼있었다. 이듬해인 2011년 2월 김재철은 MBC본사 사장에 재선임 됐는데 이때 다시 주소지가 바뀐다. 이번에는 서울일까? 아니다. 이번에도 '경남 사천시'다. '사천시 정동면'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이곳은 현재까지 김재철의 주소지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에서 무려 340km 넘게 떨어진 경남 사천시가 김재철의 주소지였던 것이다. 승용차로 가면 편도에만 4시간 반이나 걸리는 먼 곳이다.

그렇다면 이 주소지의 아파트가 '김재철 사장님'이 지금 사시는 집일까? 하지만 경비원은 김재철을 모르고 있었다. 혹시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은 김재철을 알까 물어봤지만 김재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백한 '위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결국 김재철은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경남 사천시'로 옮겨놓고 이를 5년간이나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경남 사천시' 내에서 5년에 동안 세 번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것을 보면, 실수로 주소를 수정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알고도 실제 거주지

정계진출 욕망 못 버렸나?

자유의 타의든 결국 김재철은 지난 4.11 총선에 입후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김재철은 아직도 MBC 사장 자리에 붙어있고, 지금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천에 두고 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사측은 지난 5월 17일자 회사특보를 통해 영동환 주장을 내놨다. 회사 특보는 "노조는 김 사장의 취임 직후부터 김 사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명예훼손까지 들먹여왔다. 김재철이 지금도 사천 주민이라는 걸 모르는 한심한 홍보책임자 이진숙의 헛발질이거나, 알면서도 김재철의 정계진출 야욕을 감추려는 뻔뻔한 역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드러난 비리와 불법행위만으로도 김재철은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주거 부정'이 확인돼 딱 떨어지는 구속 피의자의 요건도 갖추었다. '정계 진출'은 커녕 '구속'으로 죄 값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

김재철, 박성호 기자 '2차 해고' 확정

천길 추락 직전 절망감 사로잡힌 만행

박성호 기자회장이 끝내 두 번 해고됐다. 사측은 어제 오전 10시 반 안광환 부사장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성호 기자에 대한 해고 재심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박성호 기자와 함께 인사위에 회부돼 각각 정직 6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최형문, 왕중명 기자의 징계도 원안 그대로 김재철 사장의 책상 위에 올랐다. 오후 6시쯤 김재철의 서명으로 징계는 최종 확정되고, 징계 대상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통보됐다. 박성호 회장은 이번 파업기간 제작거부 주도를 이유로 해고됐다 정직 6개월로 감경된 바 있어, 불과 90일 사이에 두 번씩이나 해고되는 전무후무할 수난을 겪게 됐다. 징계 사유는 보도국 생성과 관련해 보도본부장의 퇴근길 항의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과 '자제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 등 반박 자료를 제출해 소명했지만 사측의 결정은 미리 짜놓은 듯 달라지지 않았다.

"권위 상실한 징계, 원천무효"

박성호 기자회장은 17년의 기자생활을 돌아보는 듯

"나를 길러준 MBC 선, 후배 동료들에게 감사드리고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함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잠시 말을 고른 박성호 회장은 "직업인으로서 목숨을 잃었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나겠다"는 짧은 말로 긴 설명을 대신했다. 기자회견 대변인을 맡아오다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된 최형문 기자는 "권위를 상실한 징계에 대해 어떤 가치판단도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최고참 안성일 조합원, 최후변론

인사위원회에는 안광환 부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편성 제작본부장, 이진숙 기획조정본부장, 조규승 경영지원본부장, 이우철 디지털본부장, 장근수 드라마본부장, 임진택 감사 등이 참석했다. 박성호 기자 등을 변호하기 위한 조합 측 증인도 출석했는데, 다른 아닌 32년차 최고참 조합원인 안성일 국장이었다. 안성일 국장은 A4지 너장에 달하는 장문의 호소문을 읽어 내려갔다. 안 국장은 "지금의 징계는 수치심과 경계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갈등만 심화시킨다"고 지적하며 "(징계를 취소해) 우리가

선후배로 다시 시작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달라"며 모두 입사 후배인 인사위원들에게 호소했다. 20년 전 노조위원장직을 역임하다 2년 8개월의 해직기자 생활을 겪기도 했던 안 국장은 "지금 사원들은 문화방송 사원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파업을 하고 있다"며 "부디 처음 입사했을 때처럼 자랑스러운 회사, 최고의 직장 MBC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를 떠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절절한 당부를 전했다.

방화벽 뒤 불장난, 호된 심판 받을 것

동료 조합원들은 사측의 부당한 징계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조합원들은 인사위가 열리는 본사 10층을 항의 방문하려 했지만 사측은 엘리베이터를 통제하고 방화벽을 닫아 걸은 뒤 계단에 청경까지 배치해 접근을 막았다. 김재철과 부역자들이 저지른 만행을 조합원 모두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머지않아 김재철이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듯 비참한 신세가 돼 쫓겨나는 그 날에도 후배를 하고 살인한 뻔뻔한 얼굴들이 방화벽 뒤에 모습을 감출 수 있을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빈 불’ 인가, 제구력 상실인가?

김재철, 34명 또 대기발령

‘빈 포인트 릴리프’ 검철의 2차 구속영장 시도마저 무산되면서 오랜 인터벌을 둔 채 할 수 없이 다시 공을 뿌리게 된 김재철이 또 다시 구위를 잃은 ‘빈 불’을 반복했다. 34명을 2차 대기발령한 것이다. 지난해 1차 때와 다른 건 이번엔 ‘빈 불’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경기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구력을 완전히 잃은 것인지조차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한계 투구를 넘긴 김재철의 공 끝에 극도의 초조함과 조바심이 묻어나는 점이다.

민사소송 각오 망언까지

2차 대기발령에는 올해 초 입사한 경력사원 11명 중 9명이 포함됐다. 임용 보름 뒤 시작된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근 들어 하는 일마다 심하게 꼬이고 있는 ‘천하의 외톨이’ 비리 백화점 김재철의 화풀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다름 천인공로할 사실은 김재철 앞잡이 이들을 상대로 ‘경력사원’이란 약점을 잡아 해고도 불사할 것이라는 비열한 합박을 조직적으로 일삼은 점이다. 장근수 도라미본부장은 어제 대기발령에 앞서 “경력직들은 특히 본보기로 반드시 해고시킬 것이다. 앞으로 경력

직을 뽑아서 인원 보충하려고 하는데 지금 파업하고 있는 경력직을 본보기로 처벌해줘야 추가 경력직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한 노동법 위반인 동시에 민사소송의 피고가 돼 거액의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망언이다. 다른 고위 간부들도 ‘악어의 눈물’을 연상시킬 법한 ‘으름장 반 읍소 반’의 공세를 퍼며 대상자들을 에둘러 협박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확인돼 ‘실소’와 ‘공분’을 함께 자아내고 있다.

특정 직종 겨냥, ‘사찰’의 그림자

1차 대기발령 직후 “파업 가담 정도를 고려해 명단을 선정했다”고 밝혀 조합 활동과 직권 일상을 은밀히 사찰해왔다는 의혹을 연연 중에 내비친 사측은 이번 2차 대기 발령을 통해 ‘사찰 활동’이 사실상 특정 직종과 부문을 겨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어제 새로 대기발령을 받은 조합원은 편제부문 14명, 보도부문 10명, 기술부문 5명, 영미부문 3명, 경영부문 2명으로 1차 35명을 합치면 대기발령자는 모두 69명에 이르게 되는데 편제부문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보도부문이 21명으로 그 뒤를 잇는다. 시사교양

PD조합원은 전체 53명 중 32%인 17명이, 아나운서 조합원은 전체 24명 중 25%인 6명이 대기발령을 받아 이번 파업 기간만이 아니라 그동안 프로그램과 뉴스 제작과정에서의 ‘공정방송 쟁취’ 활동까지 ‘대기발령’의 사정권 안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백종문 편집제작본부장, 관재홍 보도본부장, 김철진 교양인국장, 김현중 시사제작국장, 황 현 보도국장, 최재혁 아나운서국장 등이 명단을 추리는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개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합은 그러나 일부 직종의 명단 작성과정에서 사측이 어떠한 경로로 ‘사찰’ 활동을 벌였으며 이에 적극 가담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이미 상당한 정황을 확보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관련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다시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계획이다. 김재철이 어이없는 도발을 또다시 자행할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 모두에게 예외 없이 돌아갈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신인수 변호사 특별기고 대기발령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사측은 6월 4일 35명을 대기발령한데 이어 11일 2차로 34명을 대기발령하였습니다. 파업기간 중 대기발령자만 69명에 이르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대기발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제적·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무효로 보입니다.

논리적 모순, 대기발령 불성립

첫째,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을 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논리적 모순, 대기발령 자체 불성립).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취업규칙 제65조, 대법원 2003두665 판결 등), 따라서 파업이 종료된 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질 때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측이 대기발령한 69명은 현재 ‘공정방송’과 ‘공영방송 MBC 정상화’를 위한 파업에 동참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이처럼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곤란하니 직무수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나 대기발령의 개념 자체에도 반합니다.

대기발령 사유 없어 무효

둘째,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무효로 보입니다(실체적 하자 : 대기발령 사유 부존재). 취업규칙

제65조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및 조직 적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자’ 등을 대기발령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기발령 대상자에는 최일구 부국장, 정형일, 한정우 부장 등 수 십년 대공영방송 MBC를 만들어온 선배들과 이우환, 한학수 등 MBC의 대표적인 시사교양 PD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및 조직 적응력이 크게 떨어지는 자’라면 도대체 MBC에서 누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사측 주장에 난감하진 않나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력직 공개사원의 경우 애당초 직무수행이나 근무성적을 판단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대기발령은 대기발령 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로 보입니다.

진술 기회, 소명권 박탈 하자

셋째, 절차적 측면에서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보입니다(절차적 하자 : 진술기회 및 최소한의 소명권 박탈). 사측은 69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면서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는지, 대기발령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제대로 된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파업기간 중에 이처럼 막무가내로 대기발령을 남발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조차 보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기발령은 해당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방어권과 소명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

차적으로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보입니다.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넷째, 형평의 원칙 관점에서 이번 대기발령은 무효로 보입니다(형평의 원칙 위반). 판례는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징계권 남용으로 보아 무효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동일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정방송’과 ‘공영방송 MBC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파업에는 70여 명을 중재 뛰어 넘는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왜 69명만 대기 발령되어야 하는지 사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차별할 방법도,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사관리인 MBC 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특정인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에 관한 감사가 장장 4개월 동안 감감 무소식인 정황까지 더해지면 이번 대기발령은 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무효로 보입니다.

파업 중에도 노사가 지켜야 할 금도가 있습니다. 하물며 사내 구성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공영방송 MBC’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번 대기 발령은 앞서 살펴 본 법적 처원을 떠나 방송의 독립성과 노사 관계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용납되기 어려운 비정상적 처분으로 보입니다.

언론노조 탈퇴요구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사측은 어제 회사특보를 통해 “MBC 노동조합은 언론노조를 탈퇴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공정방송을 말살하고, MBC를 망친 주범들이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해고와 징계로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부당 노동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작태인 것이다.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는 법률로 보장된 권리로 사측이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사측의 ‘언론노조 탈퇴’ 주장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부당 노동행위’라는 것이 노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용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취지에서 어제 사측의 언론노조 탈퇴 요구는 명백한 노조법 위반에 해당된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단체 탈퇴 강요 등을 이유로 노조가 사측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모두 ‘노조의 권’으로 경찰에 송치됐으며, 이를 근거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제주지노위2003부노39, 부해53)

김재철 혐의에 부당노동행위 추가

사측의 ‘언론노조 탈퇴’ 도발에 노동계도 분노하고 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김재철 사건의 배면, 형평성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범위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월 말 7월 초에 경고 파업을 거쳐,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도 “MBC 사측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문을 보내기 위해 준비 중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철의 개인 비리를 가리는 데 동원돼 온 회사정보가 이전 ‘부당노동행위’에까지 악용되면서 사실상 ‘찌라시’ 수준으로 전락했다. ‘공정방송’ 말살의 주범인 김재철은 법인카드 부정사용과 무용가 11인 감제절차 특혜 지원, 부당산 투기 등에 따른 중대 범죄 혐의에다 새로 드러난 주민등록비 위반과 노조법 위반까지 나날이 새로운 죄목을 추가하면서 엄청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날에 점점 다가서고 있다.

김재철 - J씨 스캔들, 제2의 변양균 - 신정아?

제대로 뉴스데스크 14회 업로드

<제대로 뉴스데스크> 14회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이번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는 ‘김재철-J씨 커넥션’을 지난 2007년 ‘변양균-신정아 스캔들’과 비교해, 제기된 의혹과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신정아씨의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의혹과 J씨의 최승희 총사사 의혹, 변씨가 신씨와 관련된 사찰에 10억 원을 지원한 의혹과 김재철이 J씨에게 20여억 원을 밀어준 의혹 등 두 사건은 판박이처럼 닮아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전혀 탄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어 김재철이 출연료와 식사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J씨를 무차별 지원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 저촉되는 지를 상세히 분석했다. 또 MBC 노조의 파업기간 동안 사측의 편파 보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뉴스 모니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故 노무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여권 실세였던 박영준 전 차관 구속 수감’, ‘민주당 당원 레이스’ 등의 주요 이슈를 MBC 뉴스가 얼마나 축소하고 본질을 비껴갔는지, 타 언론사 보도와 비교 분석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14회는 <파업채널 M>과 ‘유 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비리왕’ 김재철을 구속 수사하라 ”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어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총합선물세트’ 김재철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두 차례 걸친 구속 시도가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경경이 ‘비리왕’ 김재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